

주유소협회, 정부에 “압박정책” 철회 요구

한국주유소협회는 8월2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기 위해 주유소를 압박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는 주유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기 위해 주유소 500곳의 장부를 확인하는 등 주유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계속해서 5%에 불과한 주유업계 마진을 문제 삼았다면 청와대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8%인 336명이 <동맹휴업 등 단체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히고 “대안주유소 설립 등 비현실적이고 부작용만 낳는 주유소 압박정책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199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유소 수는 3382곳에서 1만2933곳으로 4배 증가했고 주유소당 월평균 석유제품 판매량은 1973드럼에서 976드럼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월평균 판매량이 1000드럼 미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주유소가 66.8%에 달해 주유소 사장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23>